이슈페이퍼 2021-19

가계금융복지조사(2010~2020)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변화 분석

①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변화 총괄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1. 07.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 1

1. 들어가며 ····· 7

2. 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총괄 변화

1) 소득 및 지출 관련 변화 ····· 12

2) 가구 재무(자산 & 부채) 구조 변화 ····· 24

3) 가구 재무건전성 추이 ····· 34

3. 나가며 ····· 39

요약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날이 갈수록 급등하고 있는 주택가격은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정성을 크게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주거의 권리'라는 기본권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불평등 심화 그리고 주거 불안정성의 확대는 '저출산과 고령화, 소비둔화 및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또 다른 문제들과 연계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가족 개념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자리, 노동, 주거와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통계청이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계의 소득 및 재무 상태가 지난 11년간(2010~2020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경제 · 사회복지 · 주거 · 임금' 등 다양한 분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포괄하고 있는 조사 범위나 항목이 매우 광범위하기에, 3가지 범주의 소주제별로 3회에 걸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그 중 첫 번째로 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에 변화에 대한 총괄적 분석에 해당한다.

1) 소득 및 지출 관련 변화

2010년 2020년 사이 가구원 수는 2.9명에서 2.6명으로 0.3명이 줄었고, 가구주 평균 연령은 50.8세에서 56.1세로 5.3세가 늘었다. 저출산 고령화는 현실적 문제임이 분명했다.

세전소득의 경우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지만,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세금과 정부 지원금 등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전소득인 경상소득의 경우 평균값 연평균증가율(4.66%)이 중앙값 증가율(4.53%)보다 높았지만,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은 반대로 중앙값 연평균증가율(5.10%)이 평균값 증가율(4.73%)보다 높았다. 중앙값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 하위 50%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소득 상위 50%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의미다.

2012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되고 있는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각각의 연평균증가율과 증가액을 보면, 근로소득(4.64%와 1146만원), 재산소득(11.81%와 228만원), 공적 이전소득(12.47%와 277만원) 이었다. 증가율 측면에서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2013년부터 시작된 양육수당이나 2014년 이후 본격화된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수준의 인상 등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것이라 분석된다. 결국 세후소득의 분배지표 개선 효과는 주로 공적 이전소득의 확

대에 기인한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하여 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 비중을 평균값과 중앙값 두 가지로 산출하였다. 평균값으로 산출한 처분가능소득 비중(80.77%→81.33%, 0.56%p 상승)에 비해 중앙값으로 산출한 처분가능소득 비중(79.83%→84.42%, 4.59%p 상승)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두 비중 간의 격차가 2016년 이후 분명하게 나타나, 소득분배 개선 또한 2016년 이후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세전소득 즉 사업장 단위에서 주어지는 노동 소득 불평등은 여전한 상태였고, 여전히 불평등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신음하고 있는 가구 또한 매우 많았다. 2020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이 '0원 미만(마이너스 상태)'인 가구 비중은 0.6%에 달했는데, 이는 2012년 0.5%에 비해 0.1%p 상승한 수치였다. 게다가 2020년 소비지출액 중위값(2360만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처분가능소득 2천만원 미만 가구 누계 분포 또한 25.4%였다. 반면 처분가능소득이 1억원 이상인 가구는 2012년 3.1%에서 2020년 8.9%로 10년간 약 2.9배나 증가했다. 소득 불평등 개선이라는 사회적 숙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가계는 소비를 크게 억제해왔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 · 소비, 비소비지출 및 저축가능액 등의 변화와 증감액 그리고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소득(4233만원 → 5924만원 / 1691만원 / 4.34%), 소비지출(2302만원 → 2732만원 / 430만원 / 2.19%), 비소비지출(757만원 → 1106만원 / 349만원 / 4.93%), 저축가능액(1174만원 → 2086만원 / 912만원 / 7.70%)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연평균증가율 2.19%는 소득 연평균증가율 4.34%는 물론 저축가능액 평균값 연평균증가율 7.70%를 크게 못 미쳤다.

저축가능액은 소득에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각각의 평균값과 중앙값을 구분하여 산출했다. 저축가능액 평균값 증가율(7.70%)이 저축가능액 중앙값 증가율(7.33%)보다 높았는데, 그 이유는 하위 50% 가구 또한 소비지출을 자제했지만, 상위 50% 가구와 비교하면 소비지출에 대한 하방경직성이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소비지출 증가율은 중앙값 증가율(2.30%)이 평균값 증가율(2.19%)보다 0.11%p 높았다.

가구들이 소비지출을 억제해 온 이유로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일자리 축소 및 청년 실업의 증가,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가계 소비를 제약했을 것이다. 특히 주택가격의 급상승으로 현재 무주택자인 가구주나 청년세대는 사실상 서울에서 거주 주택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2020년 12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4299만원으로, 우리나라 평균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연간 저축가능액

2086만원을 50년 동안 꼬박 모아야 하고, 전체 가구 정 가운데 위치한 중앙값 가구라면 연간 저축가능액 1695만원을 62.9년 동안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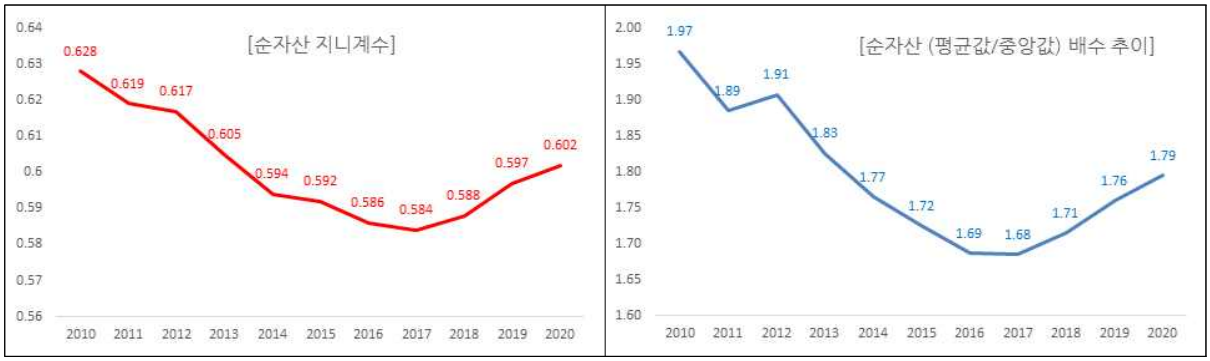
2) 가구 재무구조(자산 & 부채) 변화

가구당 평균 자산은 2010년 2억7684만원에서 2020년 4억4543만원으로 1억6859만원이 늘어 60.9% 증가했다. 부채는 4618만원에서 8256만원으로 3638만원이 늘어 78.77% 증가했는데, 부채증가율은 자산증가율보다 17.87%p나 높았다.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2억3066만원에서 3억6287만원으로 13221만원이 늘어 57.32% 증가했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하여 보면, 증가율 측면에서는 금융자산(78.46%)이 실물자산(56.16%)을 압도했으나 증감액 측면에서는 실물자산 증가액(12,241만원)이 금융자산 증가액(4,618만원)의 2.7배에 달했다.

부채 중에서는 금융부채 증가율(92.03%, 3151만원 → 6050만원)이 임대보증금 증가율(50.37%, 1468만원 → 2207만원)을 압도했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는 2010년 53.7%에서 2020년 57.7%로 4.0%p 상승했는데, 금융부채 총액이 1.92배나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추가 대출이 많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원리금상환액(연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 또한 대폭(140.14%, 494만원 → 1187만원) 증가했다.

순자산 지니계수 및 순자산 (평균값/중앙값) 배수 추이



자료)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저자 계산.

자산 대비 자산 중앙값 비중(자산 중앙값 / 평균 자산액) 추이를 보면, 2010년 50.68%에서 2017년 61.49%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추세가 전환 2020년 57.91%까지 하락했다. 이는 우리나라 가구들의 자산 불평등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다시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균 순자산 대비 순자산 중앙값 비중 또한 자산 중앙값 비중 추이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2010년 50.8% 이후 2017년 59.4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순자산 불평등이 다소나마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순자산 중앙값 비중은 이후 명백하게 하락 추

세를 보였고, 2020년 55.7%까지 내려갔다.

순자산 지니계수와 순자산 중앙값 대비 평균값(평균값/중앙값) 배수 추이를 통해서도 2017년까지의 자산 불평등의 개선 흐름과 이후의 악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2020년 전체 가구의 3.4%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였다. -1억원 미만인 가구 비중 또한 0.3%로 변함이 없었다. 순자산이 '0~1억 미만(39.3%→28.8%)' 구간과 1~2억 미만(20.3% → 17.4%)' 구간의 경우 가구 비중이 각각 10.5%p, 2.9%p 하락했다. 이외의 구간은 가구 비중이 모두 상승했는데, 특히 순자산액 '10억 이상' 구간은 3.4%에서 7.2%로 3.8%p 상승하여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유 주택가격 급등의 영향일 것이다.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과 평균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2020년 분위별 순자산액을 역산하면 최하위 1분위의 순자산액은 -1089만원으로 마이너스 상태였고, 최상위 10분위의 순자산액은 15억8574만원으로 순자산 10분위 배율(10분위/1분위)은 146.61배에 달했다. 순자산 3분위 이상 모든 분위 간 격차는 2배수 미만(1.78~1.36배 사이)이었는데, 유독 9분위에서 10분위 사이의 격차만 2.39배로 매우 크게 나타나, 진정한 의미의 고액 자산가는 최상위 10분위 계층임을 반증했다.

3) 가구 재무 건전성 추이

우리나라 가구 전체적으로 소득 및 재무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는데, 부채와 금융부채 그리고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각 78.77%와 92.03%, 140.14%로 여타 항목들보다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구들의 재무 건전성은 문제가 없는지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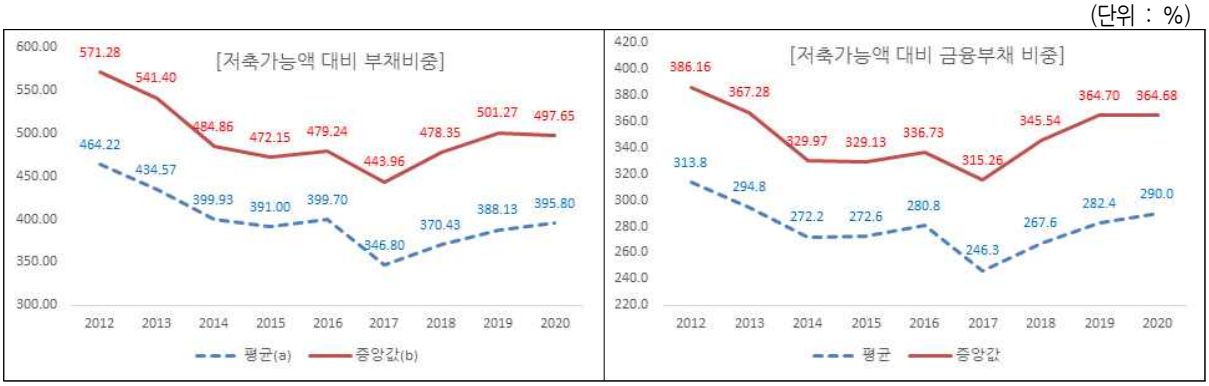
먼저 가계부채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2010년에도 151.56%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지만, 이후로도 부채가 계속 증가 2020년 171.36%로 19.80%p 상승했다. 이는 OECD 기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의 경우 2010년 16.22%에서 2020년 24.64%로 8.42%p 상승했다. 증가율로 보면 원리금상환액 비율 증가율(51.88%)이 부채 비율 증가율(13.06%)을 압도했다.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더 높은 원인으로는 거치기간의 종료에 따른 원리금 증가 효과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순자산 대비 부채 비중의 경우 2010년 20.02%에서 2020년 22.75%로 2.73%p 상승했다. 증가율은 13.63%였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2010년 53.53%에서 2013년 45.02%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그 비중이 다시 증가하면서 2020년 57.60%까지 상승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의 유동성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가계의 재무 건전성 관련 모든 지표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 & 금융부채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자료에 의거 저자 계산.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비율이나 금융부채비율 추이는 모두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하락 추세를 지속하다가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전체적으로 순자산 지니계수의 추세적 움직임과 유사했다. 2017년까지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or 금융부채) 비중이 하락했던 주요인은 가계들이 소비(생활비)지출을 엄격하게 억제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저축가능액이 줄어들면서 추세가 반전되었다.

현재 상황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위기인지 아닌지를 예단하긴 힘들다. 하지만 2015년부터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불평등 추세가 다시 강화되고 있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가구들의 재무 건전성도 추세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라 2010년대 중반 이후 소득 분배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세전소득으로서의 노동 소득(경상소득) 불평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가구주 특성(성, 종사상지위, 교육 정도, 혼인상태,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 변화를 분석하면 불평등의 심각성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 · 저 자산가 계층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올 12월에 발표될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모든 지표가 더 나빠졌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될만한 요인들을 사전에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위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첫째,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시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가계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은 투자대상이 아니라 주거 수단'이라는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 가격을 방치하고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은 소비 여력 자체가 부족하고, 고소득층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를 자제하는 동시에 부채까지 증가시키며 부동산 및 금융자산 투기를 늘리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증여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제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 극빈층에 특화된 지원책을 구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지원책은 우선하여 2020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이 '0원 미만'인 가구나 순자산 보유액이 마이너스인 가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현재 2010년과 비교할 때, 이들 가구 비중이 조금도 줄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지 노력만으로 이들의 구간 이동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화된 지원책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최근 서울연구원이 펴낸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징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거주 청년 89.1%가 우리 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청년세대는 자산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소득(85.4%), 주거(82%), 고용(75.8%), 교육(59.8%) 등의 순으로 불평등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20대보다는 30대가 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순위로 꼽은 불평등 영역도 자산(36.8%), 소득(33.8%), 주거(16.0%) 순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날이 갈수록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정성을 크게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주거의 권리'라는 기본권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15년 1월 4억9283만원에 불과했던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0년 9월 10억312만원으로 10억원 대를 돌파하며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로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2021년 1월 기준 평균 매매가격은 10억6108만원에 달했다.

불평등 심화 그리고 주거 불안정성의 확대는 '저출산과 고령화, 소비둔화 및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또 다른 문제들과 연계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가족 개념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말 보다 2만838명(0.04%) 줄어들어,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2020년 출생자 수는 27만5815명으로 전년대비 10.65%(3만2882명) 감소했다. 고령화 문제 또한 여전했는데, 연령대별 인구는 60대 이상은 모두 24.0%에 달했으며, 50대가 16.7%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이어 40대(16.0%), 30대(13.3%), 20대(13.1%), 10대(9.2%), 10대 미만(7.7%)의 순이었다.

지난 5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4%로 2015년보다 21.3%보다 9.1%p 늘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여겨져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5년 전보다 12.5%p나 줄어든 31.7%에 그쳤다. 1인 가구의 성비는 여성(53%)이 남성(47%)보다 다소 높았고, 연령대는 70세 이상(26.7%), 60대(19.0%), 50대(15.4%), 20대(13.6%), 30대(13.0%), 40대(11.3%), 10대(1.1%) 순이었다. 1인 가구의 월별 소득수준은 50~100만원 미만이 25.2%, 100만원~200만

원 미만이 25.0%였다. 1인 가구는 현재 고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고, 향후 20~30대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중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소득이나 주거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기에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불평등 심화와 더불어 세대 변동 등 전통적 가족 개념의 변화 또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와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본 보고서는 통계청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지난 10년(2010~2020년)간 소득 및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경제 · 사회복지 · 주거 · 임금' 등 다양한 분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구(가계)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 온 전통적 조사통계 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가 있다. 1963년 최초 작성된 이후 지금까지 조사방식이나 내용, 표본 등이 여러 차례 변동, 수정되어 오긴 했지만, 오래된 연혁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가구(가계)와 관련된 조사분석에 있어 기본적인 통계자료로 활용되어왔다. 그런데 가계동향조사의 주요 목적과 조사항목은 가계수지(가구의 소득 및 지출 항목조사)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 반면 2006년 최초로 작성된 이래 2010년 이후 1년 주기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소득은 물론 자산이나 부채 등의 규모와 구성 및 분포 등 다양한 미시적 재무 항목들을 포괄하고 있어, 가계의 경제적 삶의 수준이나 그 변화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가 더 수월한 자료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규모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전국 약 20,000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어 가계동향조사(약 7,200가구) 보다 크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요 연혁을 보면, 지난 2001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통계청은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및 부채 보유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가계자산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고령화나 가계부채 급증으로 가계부문의 은퇴 후 소득 적정성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미시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0년부터 통계청(가계자산), 한국은행(가구패널), 금융감독원(가계신용)이 공동으로 종래의 '가계자산조사'를 확대하여 '가계금융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부터는 표본을 확대 개편하고 복지부문을 추가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표1] '가계(가구)' 관련 통계조사 비교

구 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조사목적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조사항목	가구구성, 자산 및 금융자산 운용계획, 부채 및 부채상환능력, 소득 및 지출, 노후생활 등 185개 항목	가구원에 대한 사항(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등), 거처 구분, 자동차보유여부, 주거에 관한 사항 등 가구의 소득 및 지출항목
조사규모	전국 약 20,000가구 (2019년부터 금융, 복지부문 통합)	표본규모- 약 7,200가구
조사주기	1년	분기
자료수집	면접조사	면접조사
조사연혁	최초작성년도 : 2006 주요연혁 : ㅇ 2006년 : 제1회 가계자산조사 실시(5년주기) ㅇ 2010년 : 제1회 가계금융조사 실시(1년주기) - 가계자산조사(통계청), 가계신용조사(금융감독원), 가구패널조사(한국은행)를 통합 ㅇ 2011년 : 제2회 가계금융조사 실시 ㅇ 2012년 : 제1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전국을 대표하는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횡단 및 패널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 재설계(금융부문 :1만 가구, 복지부문 :1만 가구) - 2012. 03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개편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개편 - 연동패널 도입(횡단면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하여 그룹별 5년 주기 순환 설계)	최초작성년도 : 1963 주요연혁 : - 1951년~1962년 : 한국은행에서 조사 - 1963. 1.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으로 이관 - 2003년 : 표본개편, 도시가계조사에서 전국가계조사로 확대 - 2008년 : 연간화 및 균등화 소득분배지표 작성·공표 - 2017년 지출부문과 소득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조사 실시 - 2018년 (소득부문) 기존 다목적표본 규모 확대(8,000가구) - 2019년 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 통합(전용표본 월 7,200가구), 농림어가포함 · 이원화된 분기 소득부문과 연간 지출부문 조사를 단일한 6-6-6 연동표본체계로 통합하여 조사실시

자료)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통계 자료를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단위는 경제적 가족[1]으로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단위[2]와는 조사 및

분석단위가 다르다.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의 표본은 1만 가구였으며, 2012년 이후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의 2만 가구이다.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전체가구 통계와 보유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보유가구 통계가 있다.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각 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평가 방법은 조사기준 당시의 시가(시장가격)로 조사되었다. 2018년부터 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비소비지출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와 면접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를 이용할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에 사용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가구의 소득 및 재무(자산&부채) 관련 모든 시계열 자료는 저자가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 보고서와 통계표를 가지고 복원한 자료이다. 통계청 홈페이지의 경우 관련 통계는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7년 이후)로 시계열이 구획되어 제공되고 있다. 조사항목이나 방법의 변화에 따라 시계열이 구획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동일 목적의 동일한 조사항목의 경우 2010년부터 2020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수행함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모든 연도는 기본적으로 조사년도를 의미한다. 실제 통계에서 자산 및 부채 관련 항목들은 각 조사년도 3월말 기준(2010년만 2월말 기준) 자료이며, 소득 관련 항목들은 조사 전년도 기준 자료이다. 예를 들어 2020년으로 표기된 각 소득 및 지출 관련 데이터는 2019년 소득 및 지출(2019년 1월~12월)을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중 일부는 2012년부터 제공되고 있어, 해당 항목의 경우 본 보고서 또한 2012년 이후로 시계열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주요 데이터로는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비목별 소비지출 내역, 비목별 비소비지출 내역'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가계동향조사가 가구소득 관련 동향을 시의성 있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의 재무 건전성이나 연간 소득구조와 소득분배 상황 변화를 추적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라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가

1) 1인 가구 및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맺어져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 취업, 학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포함.
2) 취업, 학업, 의무복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제외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비혈연 동거가구원은 포함

계의 소득 및 재무 상황 변화를 기본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포괄하고 있는 조사 범위나 항목이 매우 광범위하기에, 크게 아래와 같이 소주제별로 구획, 분석하여 3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기초직인 분석에 머물렀지만, 향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표2]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분석(2010~2020년) 보고서별 소주제 및 주요 내용

보고서 순서 및 소주제	주 요 내 용
1.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변화 총괄	1) 소득 및 지출 관련 변화 2) 재무(자산 & 부채)구조 변화 3) 가구 재무 건전성 추이
2. 가구주 특성별 소득 및 재무구조	1) 가구주 성별 2) 가구주 혼인상태별 3)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4) 가구주 교육 정도별 5) 가구주 연령대별
3. 가구 특성 및 시도별 소득 및 재무구조	1) 가구원 수별 2) 소득 5분위별 3) 순자산 5분위별 4) 시 · 도별

2. 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변화 총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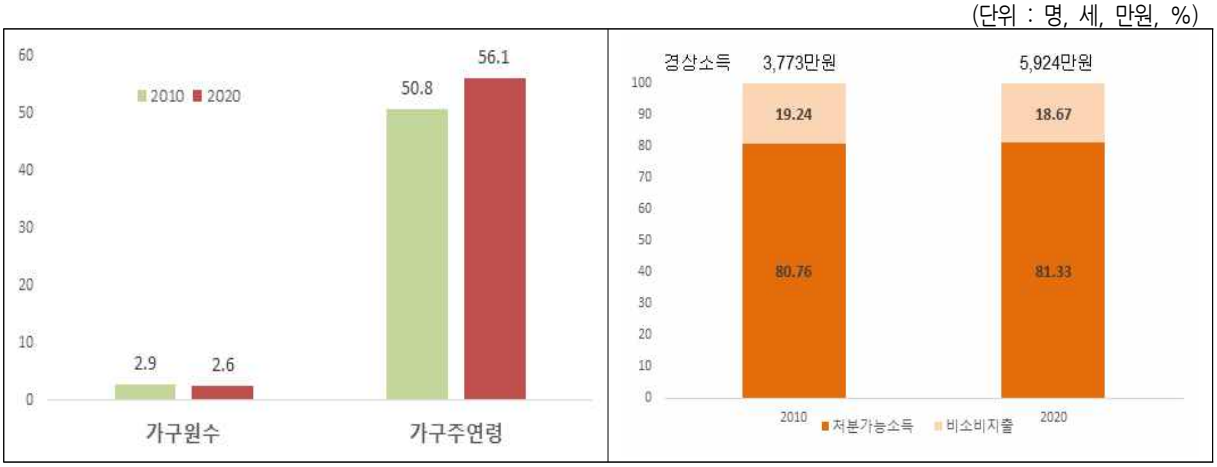
1) 소득 및 지출 관련 변화

2010년 2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가구원[4)] 수는 2.9명이었으나, 2020년 3월에는 2.6명으로 해당 기간 0.3명이 줄었다. 반면 가구주 평균 연령은 동일 기간 50.8세에서 56.1세로 5.3세가 늘었다. 저출산 고령화는 현실적 문제임이 확인되었다.

가구 경상소득[5)]은 2010년[6)] 3,773만원에서 2020년 5,924만원으로 2,151만원이 늘어나 1.57배 증가했다.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와 같은 의무성이 부여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일 기간 19.24%에서 18.67%로 다소 줄었다. 그 결과 경상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경상소득-비소비지출) 비중은 2010년 80.76%에서 2020년 81.33%로 0.57%p 상승했다.

[그림1] 전체 가구 구성 / 경상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 및 비소비지출 비중 변화

(단위 : 명, 세, 만원, %)



자료)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3)본 보고서에서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소득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관련 수치는 모두 전체 가구 평균값이다. 중앙값을 사용한 경우 별도로 중앙값임을 표기하였다.
4)가구주와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5)가구에서 한 해 동안 경상적(정기적, 규칙적, 예측 가능한)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포함한다.
6)보고서에 사용된 모든 표기년도는 조사년도를 의미. 자산 및 부채, 가구 관련 데이터는 각 조사년도 3월말 기준(2010년은 2월말)이며, 소득 및 지출 관련 데이터는 전년 기준임(2010년으로 표기된 소득은 실지로는 2019년 소득)

아래 [표3]은 가구 경상소득, 비소비지출과 처분가능소득 및 증가율 추이를 평균값과 중앙값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것이다. 먼저 세전소득의 성격을 지닌 경상소득 평균값을 보면 2010년 3,773만원에서 2020년 5,924만원으로 2,151만원이 늘어나, 연평균증가율은 4.66%에 달했다. 비소비지출은 726만원에서 1,105만원으로 380만원 늘어 연평균증가율은 4.37%였다. 동일기간 비소비지출 연평균증가율은 경상소득에 비해 0.29%p 낮았고, 처분가능소득 연평균증가율은 4.73%로 경상소득 증가율보다 0.07%p 높았다.

경상소득 중앙값은 3,000만원에서 4,652만원으로 1,6252만원이 늘어나 연평균증가율은 4.53%에 달했다. 비소비지출 중앙값은 481만원에서 633만원으로 연평균증가율은 2.86%로 경상소득 증가율보다 1.67%p 낮았다. 그 결과 처분가능소득 중앙값 연평균증가율은 5.10%로 경상소득 증가율을 보다 0.57%p 높았다.

[표3] 경상소득 · 비소비지출 및 처분가능소득 & 증가율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경상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지출액	증가율	지출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2010	3,773	-	3,000	-	726	-	481	-	3,047	-	2,395	-
2011	4,012	6.33	3,036	1.20	729	0.44	454	-5.61	3,283	7.73	2,552	6.56
2012	4,233	5.51	3,360	10.67	757	3.86	472	3.96	3,476	5.88	2,776	8.78
2013	4,479	5.81	3,600	7.14	828	9.38	513	8.69	3,651	5.03	2,946	6.12
2014	4,658	4.00	3,800	5.56	839	1.33	532	3.70	3,819	4.60	3,138	6.52
2015	4,770	2.40	3,924	3.26	843	0.48	548	3.01	3,927	2.83	3,231	2.96
2016	4,882	2.35	4,000	1.94	861	2.14	555	1.28	4,021	2.39	3,317	2.66
2017	5,478	12.21	4,300	7.50	958	11.27	571	2.88	4,520	12.41	3,616	9.01
2018	5,705	4.14	4,457	3.65	1,034	7.93	594	4.03	4,671	3.34	3,727	3.07
2019	5,828	2.16	4,567	2.47	1,098	6.19	639	7.58	4,729	1.24	3,808	2.17
2020	5,924	1.65	4,652	1.86	1,106	0.73	633	-0.94	4,818	1.88	3,927	3.13
증감	2,151		1,652		380		152		1,771		1,532	
연평균 증가율	4.66		4.53		4.37		2.86		4.73		5.10	

자료)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세전소득인 경상소득의 경우 평균값 연평균증가율(4.66%)이 중앙값 연평균증가율(4.53%)보다 높다는 것은, 세전소득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중앙값 연평균증가율(5.10%)이 평균값 증가율(4.73%)보다 다소 높았는데, 이는 세금과 정부 지원금 등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2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되고 있는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을 추이를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2012년 2,645만원에서 3,791만원으로 1,146만원이 늘어났으며, 연평균증가율은 4.64%에 달했다. 소득액 측면에서는 근로소득 증가액이 1,146만원으로 소득총액 증가분 1,691만원의 67.8%에 달했지만, 연평균증가율만 놓고 보면 재산소득(11.81%)과 공적이전소득(12.47%) 증가율이 근로소득(4.64%) 증가율을 크게 앞섰다. 재산소득은 2012년 189만원에서 2020년 417만원으로 228만원 늘었으며, 공적이전소득은 180만원에서 457만원으로 277만원 증가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료 등 가구 소유의 재산을 통해 얻은 소득을 지칭하는데, 해당 기간 저금리 상황이나 주식시장의 박스권 움직임을 고려하면, 재산소득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임대료 등 실물자산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공적 이전소득은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일체의 지원금(기초생활 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의 정부 보조금)을 의미하는데, 2013년부터 시작된 양육수당이나 2014년 이후 본격화된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정책의 확대에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중앙값으로 산출한 처분가능소득 연평균증가율(5.10%)이 경상소득 중앙값 증가율(4.53%)이나 처분가능소득 평균값 증가율(4.73%)에 비해 높게 나타나 확인된 소득재분배 효과는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표4]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가구소득(전체)		근 로 소 득		사 업 소 득		재 산 소 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2012	4,233	-	2,645	-	1,135	-	189	-	180	-	84	-
2013	4,479	5.81	2,889	9.22	1,125	-0.88	204	7.94	187	3.89	74	-11.90
2014	4,658	4.00	3,025	4.71	1,159	3.02	190	-6.86	211	12.83	73	-1.35
2015	4,770	2.40	3,130	3.47	1,142	-1.47	191	0.53	240	13.74	67	-8.22
2016	4,882	2.35	3,199	2.20	1,119	-2.01	221	15.71	275	14.58	67	0.00
2017	5,478	12.21	3,499	9.38	1,217	8.76	353	59.73	328	19.27	81	20.90

2018	5,705	4.14	3,640	4.03	1,243	2.14	380	7.65	351	7.01	91	12.35
2019	5,828	2.16	3,781	3.87	1,177	-5.31	380	0.00	387	10.26	102	12.09
2020	5,924	1.65	3,791	0.26	1,151	-2.21	417	9.81	457	18.18	107	5.32
증감액	1,691		1,146		16		228		277		23	
연평균 증가율	4.34		4.64		0.25		11.81		12.47		3.65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소득액에서 소득원천별 소득 비중 변화 역시, 재산소득(2.58%p)과 공적 이전소득(3.47%p)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근로소득 비중은 2012년 62.49%에서 2020년 63.99%로 1.51%p 상승했다.

사업소득은 2012년 1,135만원에서 2020년 1,151만원으로 증가액이 16만원에 불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8%에서 19.43%로 −7.38%p나 하락했다. 사업소득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자영업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을 의미하는바, 사업소득 비중이 다른 소득 부문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은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나빠졌음을 추론케 한다. 자영업자의 소득 관련한 사항은 이후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분석에서 보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4]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비중 변화

(단위 : 만원, %, %p)

구 분		전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소득액	2012	4,233	2,645	1,135	189	180	84
	2020	5,924	3,791	1,151	417	457	107
	증감	1,691	1,146	16	228	277	23
비 중	2012	100.00	62.49	26.81	4.46	4.25	1.98
	2020	100.00	63.99	19.43	7.04	7.72	1.81
	증감(%p)	-	1.51	-7.38	2.58	3.47	-0.17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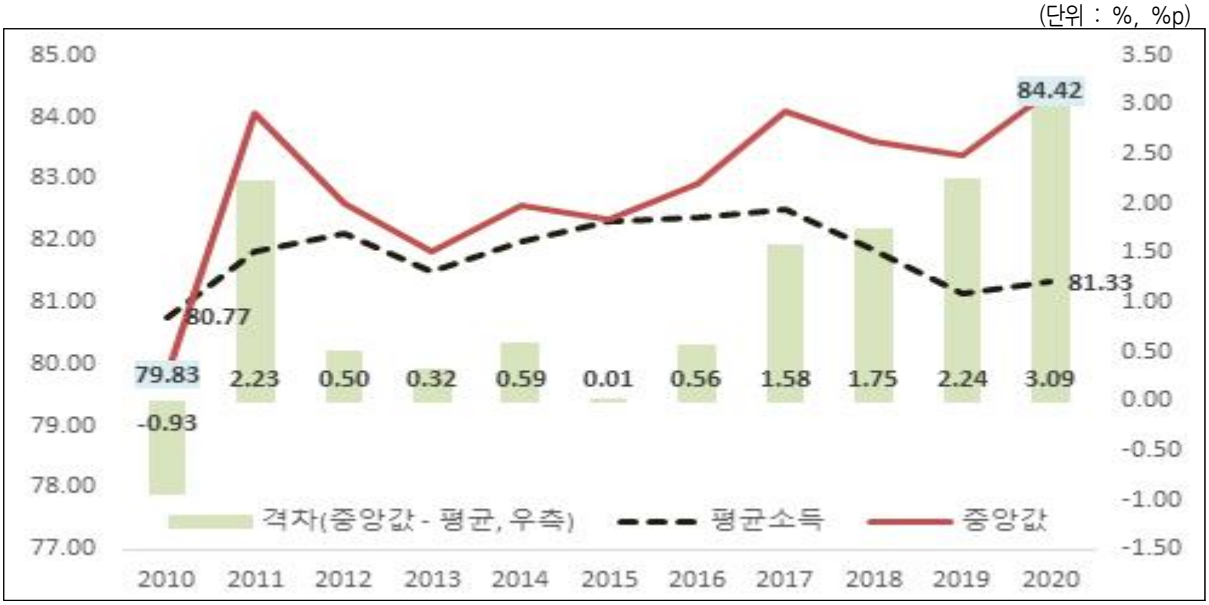
공적 이전소득의 두드러진 증가가 보여주는 효과는 '[그림2] 경상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 비중(평균값&중앙값) 추이'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세후소득의 성격을 지닌 처분가능소득이 세전소득인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 것인데. 평균값(처분가능소득 평균값 / 경상소득 평균값)과 중앙값(처

분가능소득 중앙값 / 경상소득 중앙값)으로 구분하여 그 비중을 산출한 것이다.

평균값으로 구한 처분가능소득 비중은 2010년 80.77%에서 2020년 81.33%로 0.56%p 상승했다. 반면 중앙값으로 구한 경상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 비중은 79.83%에서 2020년 84.42%로 4.59%p나 상승했다. 게다가 2016년 이후로 중앙값으로 산출한 처분가능소득 비중이 평균값 비중과 비교할 때 추세적으로 확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값과 평균값 비중 간의 격차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데, 2016년 0.56%p에서 2020년 3.09%p까지 격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값으로 구한 처분가능소득 비중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은, 중앙값 이하 소득 계층의 소득증가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복지정책 확대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만약 평균값 증가율이 중앙값 증가율보다 더 크다면 평균값을 상회하는 소득 계층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2] 경상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 비중(평균값 및 중앙값) 추이

(단위 : %, %p)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이거 저자 계산

처분가능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 또한 2012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되고 있는바, 그 추이는 아래 [표6]과 같다. 처분가능소득이 '0 미만(마이너스 상태)'인 가구 비중은 2012년 0.5%에서 2020년 0.6%로 0.1%p 상승했다. 우리나라 가구의 0.6%가 처분가능소득 자체가 아예 없고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다. 이들 가구는 기존에 저축해둔 자금이 없다면, 친지의 지

원이나 빚을 내어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반면 처분가능소득이 1억원 이상인 가구는 2012년 3.1%에서 2020년 8.9%로 10년간 약 2.9배나 증가했다.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것은 일정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소득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는 가구가 여전히 많이 있음을 증명한다.

처분가능소득이 마이너스 상태인 가구를 제외하고, '0~1 미만' 구간부터 '3~4 미만' 구간까지 가구 비중은 하락(-6.8%p~-2.7%p)했고, '4~5 미만' 구간 이상은 가구 비중이 상승했다. 2012년 처분가능소득 평균액인 3,476만원이 속하는 구간(3~4 미만) 이하 가구 비중을 합산하면 전체 가구의 68.5%가 이에 해당한다. 2020년 처분가능소득 평균액인 4,818만원이 속하는 구간(4~5 미만) 이하 가구 비중을 합산하면 62.2%의 가구가 해당한다.

2012년 소비지출액(2,302만원)과 2020년 소비지출액(2,732만원)이 속하는 구간 '2~3 미만' 이하 가구 비중을 보면 2012년엔 53.9%의 가구가 2020년엔 39.0% 가구가 이에 해당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면 소득 불평등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연간 처분가능소득이 마이너스 상태인 가구가 0.6%나 존재하고, 2020년 소비지출액 중위값(2,360만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처분가능소득 2천만원 미만 가구 누계 분포가 25.4%나 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소비할 소득 자체가 없거나, 기본적 생활비마저 부족한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처분가능소득 구간별로 특화된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6] 처분가능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 추이

(단위 : 천만원, %, %p)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
-1미만	0.1	0.2	0.1	0.1	0.1	0.1	0.1	0.1	0.2	0.1
-1~0미만	0.4	0.5	0.5	0.4	0.3	0.5	0.5	0.5	0.4	0.0
0~1미만	16.4	15.4	14.9	14.1	13.6	11.8	11.2	10.6	9.6	- 6.8
1~2미만	19.2	17.6	15.8	15.8	15.6	15.3	15.0	14.9	15.2	- 4.0
2~3미만	17.8	17.1	16.3	16.1	15.7	13.9	13.6	13.6	13.6	- 4.2
3~4미만	14.6	14.6	15.3	14.7	14.2	13.0	12.7	12.6	11.9	- 2.7
4~5미만	10.3	11.1	11.4	11.4	11.8	10.7	11.4	11.0	11.3	1.0
5~6미만	7.1	7.6	8.2	8.5	8.5	8.8	8.4	8.9	9.0	1.9
6~7미만	4.8	5.3	5.8	5.8	6.2	6.7	6.6	6.6	7.4	2.6
7~8미만	3.1	3.5	3.6	4.3	4.4	5.3	5.4	5.6	5.8	2.7
8~9미만	1.9	2.0	2.3	2.5	2.9	3.7	4.2	3.8	4.1	2.2
9~10미만	1.2	1.5	1.7	2.0	2.0	2.9	2.4	3.0	2.8	1.6

10이상	3.1	3.5	4.0	4.4	4.7	7.2	8.5	8.7	8.9	5.8
평균(만원)	3,476	3,651	3,819	3,927	4,021	4,520	4,671	4,729	4,818	1,342
중앙값(만원)	2,776	2,946	3,138	3,231	3,317	3,616	3,727	3,808	3,927	1,151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주) 증감은 2020년 수치 – 2012년 수치의 차(단위 : %p, 만원).

2012년 이후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7] 추이를 2012년 2,302만원이었던 지출총액은 2020년 2,732만원으로 430만원이 늘어 18.68%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타지출(44.92%)을 제외하고 의료비(39.39%), 식료품비(28.53%), 주거비(10.27%)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의료비의 경우 2012년 132만원에서 2020년 184만원으로 연간 지출액이 52만원 늘었다. 식료품비의 경우 2012년 638만원에서 2020년 820만원으로 182만원 증가했다.

교육비의 경우 특이하게도 2012년 349만원에서 2020년 314만원으로 35만원이 줄어 10.03% 감소했다. 교육비가 감소한 원인을 추정해보면, 평균 가구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즉 교육비 지출 대상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저출산 현상과 연관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지출 통계에 맞춰 해당 기간 평균 가구원 수를 보면 2011년 3.0명에서 2019년 2.7명으로 0.3명이 줄었다.

[표7] 비목별 소비지출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소비 지출계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지출
2012	2,302	638	292	349	132	267	161	463
2013	2,303	624	302	340	138	269	173	456
2014	2,306	633	303	335	148	268	175	445
2015	2,327	660	304	321	151	266	176	449
2016	2,340	673	306	313	152	257	174	466
2017	2,473	709	304	317	162	260	172	550
2018	2,601	757	318	317	167	265	170	607
2019	2,692	793	315	318	177	263	166	660
2020	2,732	820	322	314	184	257	165	671
증감	430	182	30	-35	52	-10	4	208

7)지출 또한 소득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지출을 의미. 즉, 2012년으로 표기된 지출액은 2011년에 이루어진 소비지출임. 이하 상동.

증감률	18.68	28.53	10.27	-10.03	39.39	-3.75	2.48	44.92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비목별 소비지출 변화를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기타지출 비중이 20.11%에서 24.56%로 4.45%p 상승하여 그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식료품비 비중이 27.72%에서 30.01%로 2.30%p 상승했고, 의료비 비중도 1.0%p(5.73% → 6.73) 올랐다. 교육비(−3.67%p), 교통비(−2.19%p), 통신비(−0.95%p), 주거비(−0.90%p) 등의 소비지출액 비중은 하락했다.

[표8] 비목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단위 : 만원, %, %p)

구 분		소비지출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지출
지출액	2012	2,302	638	292	349	132	267	161	463
	2020	2,732	820	322	314	184	257	165	671
	증감	430	182	30	-35	52	-10	4	208
비중	2012	100.00	27.72	12.68	15.16	5.73	11.60	6.99	20.11
	2020	100.00	30.01	11.79	11.49	6.73	9.41	6.04	24.56
	증감	-	2.30	-0.90	-3.67	1.00	-2.19	-0.95	4.45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표9]는 소득 및 소비 · 비소비지출 모두 평균값을 사용하여 산출한 평균 저축가능액이다. 아래와 같이 소득에서 소비지출액과 비소비지출액은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소비 또는 비소비지출 이외에 다른 지출이 전혀 없다면, 해당 가구는 이를 적립하여 저축이든 투자든 어떤 형태로든 활용 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저축가능액이라 칭했다.

2012년에서 2020년까지 소득액은 1,691만원이 늘어나면서 연평균 4.34% 증가했다. 동일기간 비소비지출은 연평균 4.93% 증가해 소득 증가율을 상회했다. 반면 소비지출액은 8년간 430만원 늘어나 연평균증가율은 2.19%에 그쳤다. 가계들이 소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소득에서 모든 지출을 차감한 잔액(저축가능액)은 912만원이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은 7.70%로 소득 증가율 4.34%를 크게 상회했다.

[표9] 소득 및 지출, 저축가능액 추이(평균)

(단위 : 만원, %)

구 분	소득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저축가능액

	소득액(a)	증가율	지출액(b)	증가율	지출액©	증가율	잔액 (a-b-c)	증가율
2012	4,233	-	2,302	-	757	-	1,174	-
2013	4,479	5.81	2,303	0.04	828	9.38	1,348	14.82
2014	4,658	4.00	2,306	0.13	839	1.33	1,513	12.24
2015	4,770	2.40	2,327	0.91	843	0.48	1,600	5.75
2016	4,882	2.35	2,340	0.56	861	2.14	1,681	5.06
2017	5,478	12.21	2,473	5.68	958	11.27	2,047	21.77
2018	5,705	4.14	2,601	5.18	1,034	7.93	2,070	1.12
2019	5,828	2.16	2,692	3.50	1,098	6.19	2,038	(1.55)
2020	5,924	1.65	2,732	1.49	1,106	0.73	2,086	2.35
증감	1,691		430		349		912	
연평균 증가율	4.34		2.19		4.93		7.7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저자 계산

저축가능액은 2012년 1,174만원에서 2020년 2,086만원으로 8년 동안 912만원 늘었다. 소득 대비 저축가능액 비중은 2012년 27.73%에서 2017년 37.3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추세가 전환되면서 2020년 비중은 35.21%였다. 2017년 이후로 비중이 하락 추세로 전환했는데,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의 소득,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증가율을 별도로 계산하면, 소득 증가율(8.14%)에 비해 소비지출 증가율(10.47%)이나 비소비지출 증가율(15.45%)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소득액 대비 저축가능액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저자 계산

아래 [표10]은 소득 및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모두 전체 가구 중앙값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값으로 산출한 소득 증가액은 1,292만원으로 증가율은 4.17%였다. 평균값과 비교할 때 증가액은 393만원 감소했고, 증가율은 0.17%p 하락했다. 소비지출의 경우 평균값 증가율 2.19%였지만, 중앙값으로 산출한 소비지출 증가율은 2.30%로 오히려 0.11%p 상승했다. 중앙값으로 산출한 소비지출액의 상대적 증가로 인해 중앙값으로 산출한 저축가능액 증가율은 7.33%로 평균값 증가율(7.70%)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중앙값으로 산출한 소비지출 증가율(2.30%) 역시 소득 중앙값 증가율(4.17%)에 비해 1.87%p나 낮은 결과를 보였는바, 하위 50% 가구 역시 최대한 소비를 자제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0] 소득 및 지출, 저축가능액 추이(중앙값)

(단위 : 만원, %)

구 분	소득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저축가능액	
	소득액(a)	증가율	지출액(b)	증가율	지출액©	증가율	잔액(a-b-c)	증가율
2012	3,360	-	1,970	-	436	-	954	-
2013	3,600	7.14	2,005	1.78	513	17.66	1,082	13.42
2014	3,800	5.56	2,020	0.75	532	3.70	1,248	15.34
2015	3,924	3.26	2,051	1.53	548	3.01	1,325	6.17
2016	4,000	1.94	2,043	(0.39)	555	1.28	1,402	5.81
2017	4,300	7.50	2,130	4.26	571	2.88	1,599	14.05
2018	4,457	3.65	2,260	6.10	594	4.03	1,603	0.25
2019	4,567	2.47	2,350	3.98	639	7.58	1,578	(1.56)
2020	4,652	1.86	2,360	0.43	633	(0.94)	1,659	5.13
증감	1,292		390		197		705	
연평균 증가율	4.17		2.30		4.90		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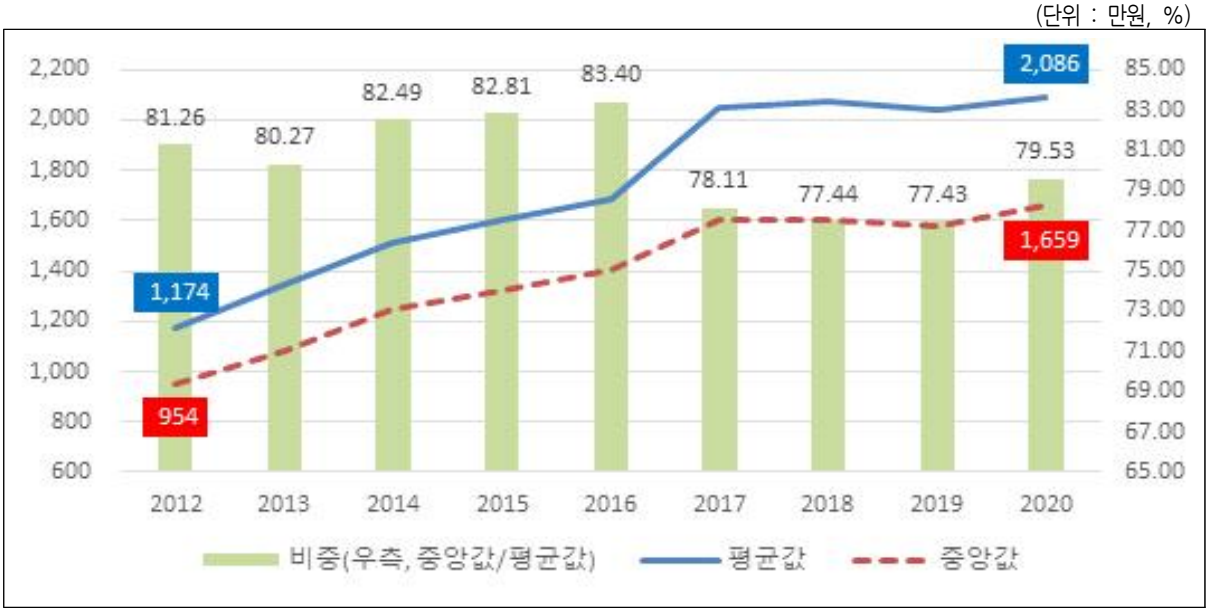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저자 계산

평균 저축가능액 대비 중앙값 저축가능액 비중(저축가능액 중앙값 / 평균 저축가능액) 추이를 보면, 2012년 81.26%에서 2016년 83.40%까지 상승하다가, 2017 추세가 급반전 78.11%까지 하락했다. 2020년 비중은 79.53%로 소폭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평균 저축가능액과 저축가능액 중앙값과의 금액 차는 2012년 220만원(1174만원 – 954만원)에서 2020년 427만원(2,086만원 – 1,659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비소비지출은 평균값 증가율(4.93%)이 중앙값 증가율(4.90%) 보다 0.03%p 높았지만, 소비지출 증가율은 중앙값 증가율(2.30%)이 평균값 증가율(2.19%) 보다 0.11%p 높았다. 소비지출에 있어 중앙값 증가율이 평균값보다 높았다는 의미는, 상위 50% 가구가 하위 50% 가구에 비해 더 많이 소비를 억제했다는 의미다. 그 결과 저축가능액은 평균값 증가율(7.70%)이 중앙값 증가율(7.33%) 보다 0.37%p 높았다. 이는 하위 50% 가구의 경우 생활비를 줄여 저축가능액을 늘리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즉 소비지출에 대한 하방경직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4] 평균 저축가능액 대비 저축가능액 중앙값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의거 저자 계산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비지출 연평균증가율(2.19%)은 동일 기간 소득 증가율(4.34%)에 비해 2.15%p나 낮았다. 소비지출 중앙값 연평균증가율(2.30%) 또한 소득 중앙값 연평균증가율(4.17%)과 비교할 때 1.87%p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치가 의미하는 바는 상위 50% 가구는 물론이고 하위 50% 가구 또한 소비지출을 자제해왔다는 사실이다.

금액으로 보면 평균 소득액은 동일 기간 연 1,691만원 많아졌지만, 소비지출 증가액은 430만원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소득 중앙값은 또한 1,292만원 늘었지만, 소비지출 증가액은 연 390만원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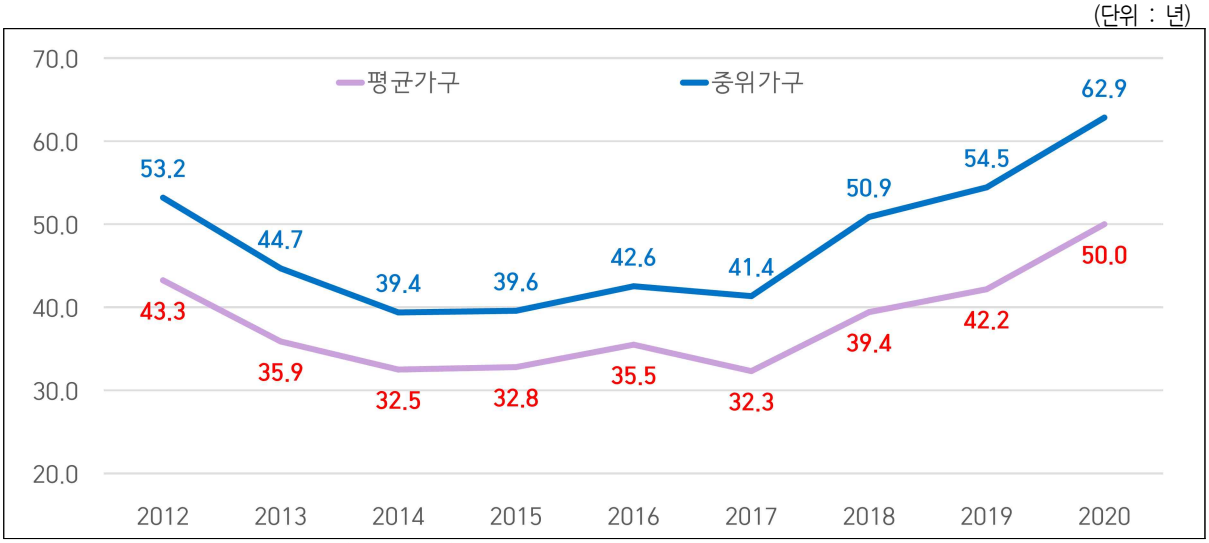
가계들이 이처럼 최대한 소비지출을 억제해 온 이유로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양질의 일자리 축소 및 청년 실업의 증가,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가계 소비를 제약했을 것이다.

아래 그림은 가구 저축가능액(평균 & 중앙값)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액(매년 12월 기준)을 모으는데, 몇 년이 소요되는지를 산출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 년도 12월 매매가 기준이며, 저축가능액은 조사연도 기준이다. 2010년 1월 5억3994만원이었던 평균 매매가격은 2020년 12월 10억4299만원까지 상승했다. 2020년 평균 소득을 가진 가구가 2020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10억 4299만원을 모으려면, 연간 저축가능액 2,086만원을 50년 동안 꾸준히 적립해야 가능하다. 전체 가구 한가운데 위치한 중앙값 가구라면 저축가능액 연간 1,659만원을 62.9년 동안 꾸준히 모아야 가능하다.

이는 현재 무주택자인 가구주들이나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사실상 서울에서 거주 주택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현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모두가 불안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대변하는 사례이다.

[그림5]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모으기 소요 기간 추이

(단위 : 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KB주택가격동향에 의거 저자 계산

주) 소요시간(년)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각 년도 12월) / 각 년도 저축가능액(평균 & 중앙값)

2) 가구 재무(자산&부채)구조 변화

평균 자산은 2010년 2억7684만원에서 2020년 4억4543만원으로 1억6859만원이 늘어나 60.9% 증가했다. 부채는 4,618만원에서 8,256만원으로 3,638만원이 늘어 78.77% 증가,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에 비해 17.87%p나 높았다.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2억3066만원에서 3억6287만원으로 57.37%가 증가, 1억3221만원이 많아졌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하여 보면, 증가율 측면에서는 금융자산(78.46%)이 실물자산(56.16%)을 압도했으나 증감액 측면에서 보면 실물자산 증가액(1억2241만원)이 금융자산 증가액(4,618만원)의 2.7배였다. 높은 증가율을 반영, 자산 내 금융자산 비중을 보면 2010년 21.26%에서 2020년 23.58%로 2.32%p 상승했다. 반면 실물자산 비중은 78.74%에서 76.42%로 감소했다. 금융자산 비중이 2.32%p 상승하긴 했지만, 2020년 기준 실물자산 비중 76.42%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부채의 경우 금융부채가 증가율이나 증감액 측면 모두 임대보증금을 압도했다. 증가율은 금융부채가 92.03%, 임대보증금은 50.37%였다. 금융부채는 3,151만원에서 6,050만원으로 2,899만원 늘었으며, 임대보증금은 1,468만원에서 2,207만원으로 739만원 증가했다.

[표11] 가구의 자산 및 부채 변화

(단위 : 만원, %)

구 분		순자산	자산			부채		
				금융자산	실물자산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2010	금액	23,066	27,684	5,886	21,798	4,618	3,151	1,468
	(비중)		(100.0)	(21.26)	(78.74)	(100.0)	(68.23)	(31.79)
2020	금액	36,287	44,543	10,504	34,039	8,256	6,050	2,207
	(비중)		(100.0)	(23.58)	(76.42)	(100.0)	(73.28)	(26.73)
증감액		13,221	16,859	4,618	12,241	3,638	2,899	739
증가율		57.32	60.90	78.46	56.16	78.77	92.03	50.37

자료)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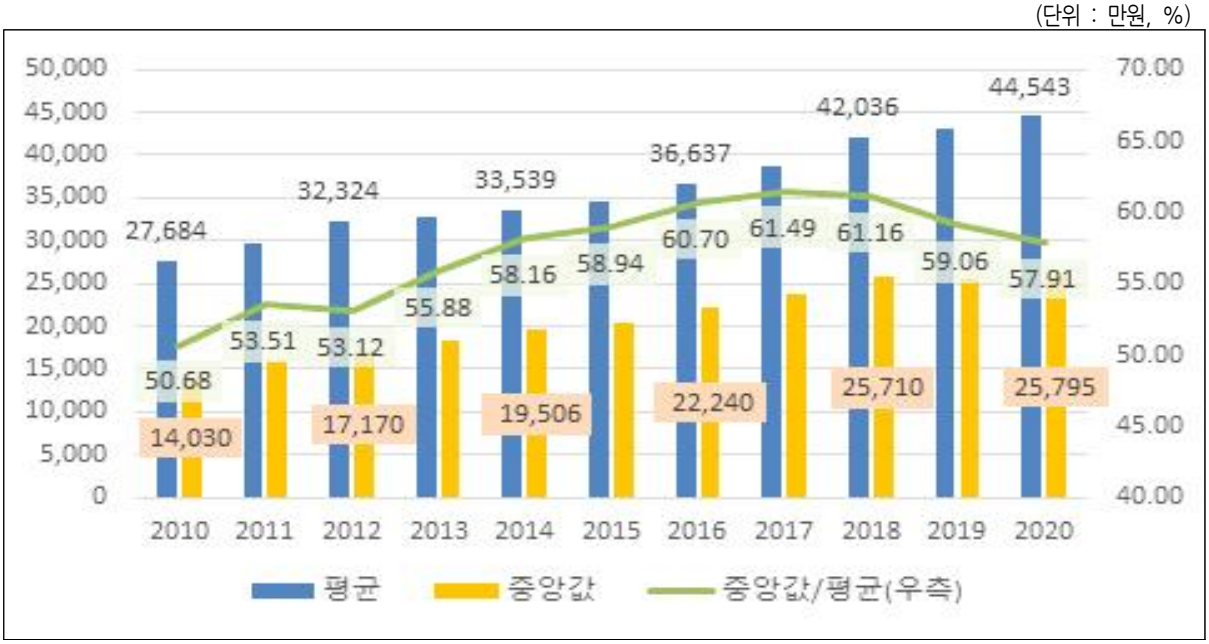
아래 그림은 평균 자산 및 중앙값, 그리고 평균 자산액 대비 자산 중앙값(자산 중앙값 / 평균 자산액)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 가구 평균 자산은 27,684만원이며 자산 중앙값은 14,030만원으로, 평균 자산액 대비 중앙값 비중(중앙값/평균)은 50.68%였다. 동 비중은 2017년 61.49%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추세가 전환되어 2020년 기준 평균 자산은 44,543만원 중

앙값은 25,795만원으로 중앙값 비중은 57.91%까지 떨어졌다.

평균 자산 대비 자산 중앙값 비중은 자산 보유액 하위 50% 가구의 자산 증감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평균 자산액 대비 중앙값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자산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음을, 중앙값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자산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6]에서 중앙값 비중이 일정 기간 상승하다가 다시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2017년까지 자산 불평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불평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림6] 평균 자산액 및 중앙값 & 평균 대비 중앙값 비중(중앙값/평균)

(단위 : 만원, %)



자료)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저자 계산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자산 및 부채증가율 추이를 보면, 아래 [표12]와 같다. 해당 기간 연평균 자산증가율은 4.90%였지만, 금융부채 연평균증가율은 6.79%로 자산증가율보다 1.89%p나 높았다. 동일 기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한 가계신용(가계대출 + 판매신용) 연평균증가율은 7.45%였다. 한국은행 기준 가계신용 연평균증가율(7.45%)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부채 증가율(6.79%)보다 0.66%p 높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가계신용은 매년 12월말 기준이며,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부채는 매년 3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준시점의 상이점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12] 자산 및 부채 증가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자산 증가율	7.52	8.60	1.13	2.60	3.42	5.63	5.55	8.70	2.75	3.13	4.90
금융부채 증가율	14.17	2.42	7.87	3.62	5.90	8.25	6.78	9.88	3.90	5.13	6.79
가계신용 증가율	8.65	5.20	5.73	6.50	10.86	11.59	8.05	5.93	4.14	7.86	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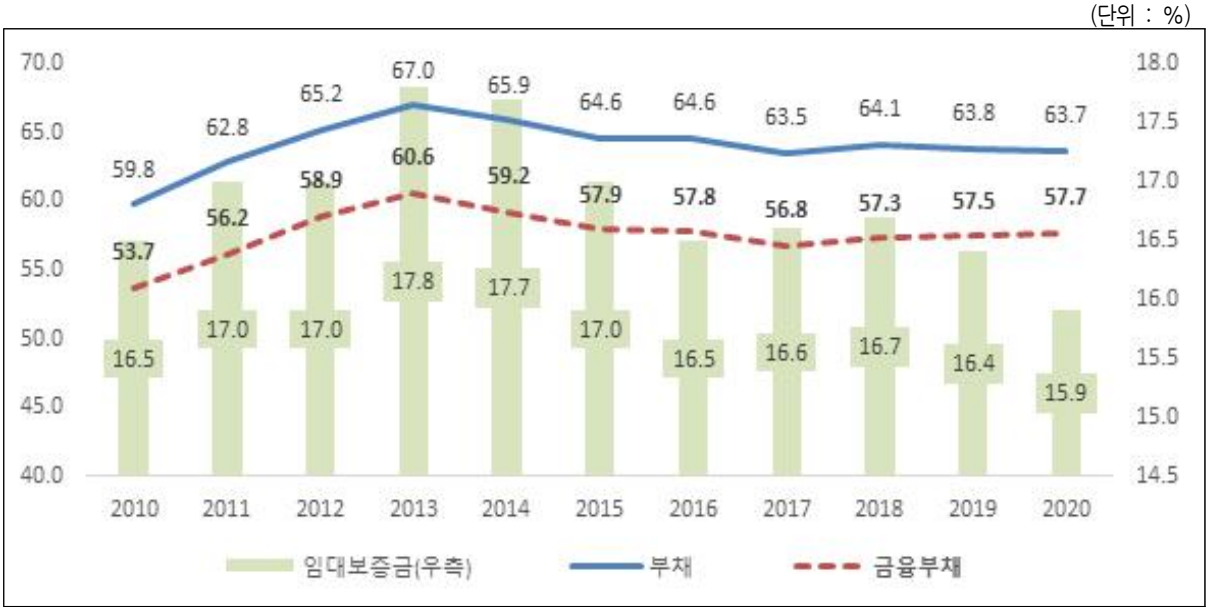
자료)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한국은행 ECOS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2010년 59.8%에서 2020년 63.7%로 3.9%p 상승했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는 53.7%에서 57.7%로 4.0%p의 상승했다. 반면 임대보증금 보유 가구는 16.5%에서 15.9%로 0.6%p 하락했다. 결국 부채 보유 가구 증가분 대개가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 추정된다.

금융부채 총액이 2010년 3,151만원에서 2020년 6,050만원으로 1.92배나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 가구 비율 3.9%p 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신규로 대출을 받은 가구 증가에 의한 것보다는, 기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추가 대출 증가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6] 부채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보유가구 비율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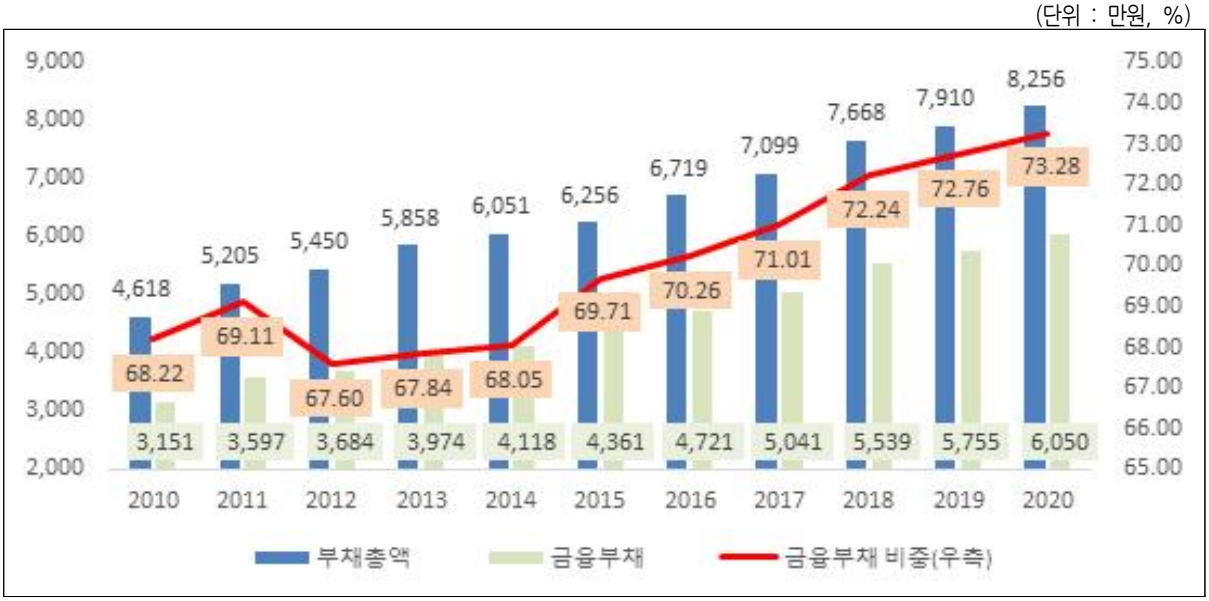
자료)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임대보증금 부채를 보유한 가구, 즉 임대 가구는 2010년 16.5%%에서 2013년 17.8%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 세로 전환, 2020년 15.9%의 가구가 임대보증금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9년 3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대가구를 328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임대 가구 비중 16.7% 중 주택임대가 8.1%, 상가 등 비주택이 5.2%, 동시 임대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가구는 고소득 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은 편으로, 임대 가구 중 소득 4~5분위 가구가 59.5%, 60세 이상이 41.8%를 차지했다.

아래 [그림8]은 연도별 부채 및 금융부채 그리고 금융부채 비중(금융부채/부채) 추이를 보여준다. 2010년 가구당 부채액은 4,618만원이며 이중 금융부채는 3,151만원으로, 금융부채 비중(금융부채/부채)은 68.22%였다. 금융부채 비중은 2012년 67.6%까지 일시 하락했다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020년 73.28%(금융부채 6,050만원/부채총액 8,256만원)까지 높아지면서, 2010년 대비 5.06%p 상승하였다.

[그림8] 부채 및 금융부채 & 금융부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자료)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가구 금융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원리금상환액(연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금융부채 증가율(92.03%, 3,151만원 → 6,050원)도 높았지

만,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은 140.14%(494만원→1,187만원)에 달했다.

금융부채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 또한 2010년 15.69%에서 2020년 19.62%로 3.93%p나 상승했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는 2010년 전체 가구의 53.7%에서 2020년 57.7%로 4.0%p 상승했다. 원리금상환액 보유 가구는 2010년 50.8%에서 2020년 59.5%로 그 비중이 8.7%p나 상승했다.

[그림9] 금융부채 및 원리금상환액 & 원리금상환액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자료)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은 2010년 23,066만원에서 2020년 36,287만원으로 13,221만원이 증가하여 57.32%의 증가율을 보였다. 순자산 중앙값은 2010년 11,724만원에서 2020년 20,218만원으로 8,494만원이 증가, 증가율은 72.45%에 달했다. 평균 순자산에 비해 순자산 중앙값 증가율이 더 높았다.

그 결과 평균 순자산 대비 중앙값 비중 또한 2010년 50.83%에서 2020년 55.72%로 4.89%p 상승하였다. 2020년 평균 순자산 대비 순자산 중앙값 비중이 2010년과 비교할 때 높아졌다는 것은, 2010년도에 비해서는 2020년 자산 불평등이 다소나마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값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순자산 하위 50% 가구의 순자산액 증가가 상위 50%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13] 가구 순자산 평균 및 중앙값 & 평균값 대비 중앙값 비중

(단위 : 만원,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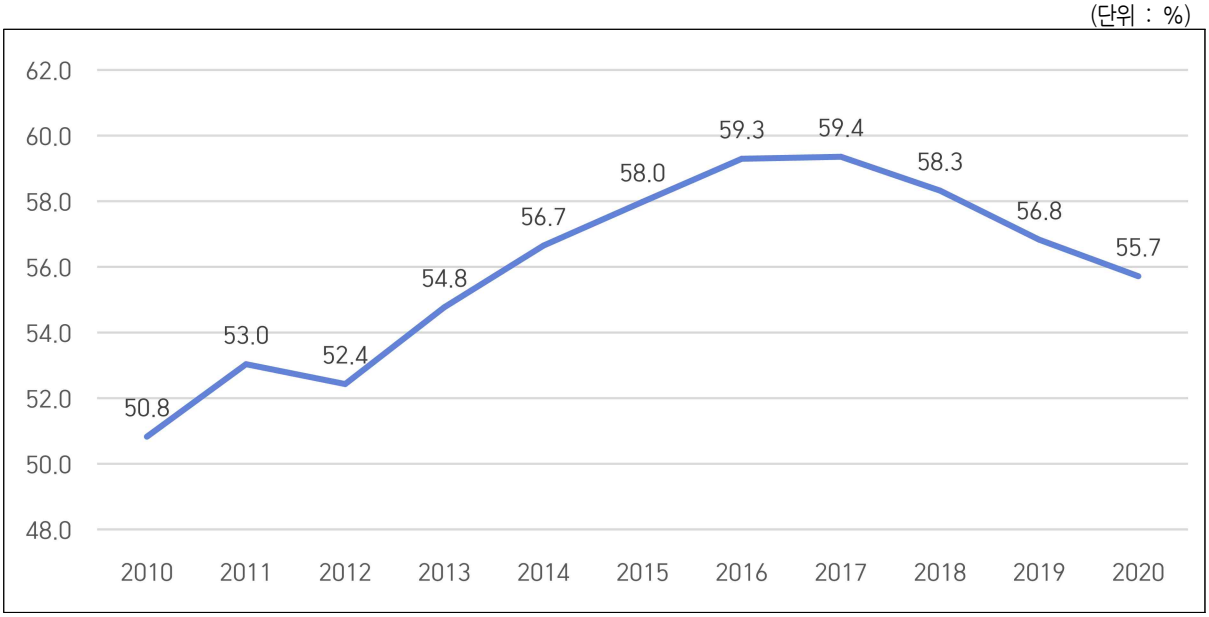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
평 균	23,066	24,560	26,875	26,831	27,488	28,429	29,918	31,572	34,368	35,281	36,287	13,221
중앙값	11,724	13,026	14,091	14,696	15,572	16,484	17,740	18,740	20,045	20,050	20,218	8,494
중앙값/평균	50.83	53.04	52.43	54.77	56.65	57.98	59.30	59.36	58.32	56.83	55.72	4.89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평균 순자산 대비 순자산 중앙값 비중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10]과 같은데, 2010년 50.8% 이후 2017년 59.4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순자산 불평등이 다소나마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순자산 중앙값 비중은 명백하게 하락 추세를 보였고, 2020년 55.7%까지 내려갔다. 순자산 중앙값 비중 하락은 순자산 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의미다.

[그림10] 평균 순자산 대비 순자산 중앙값 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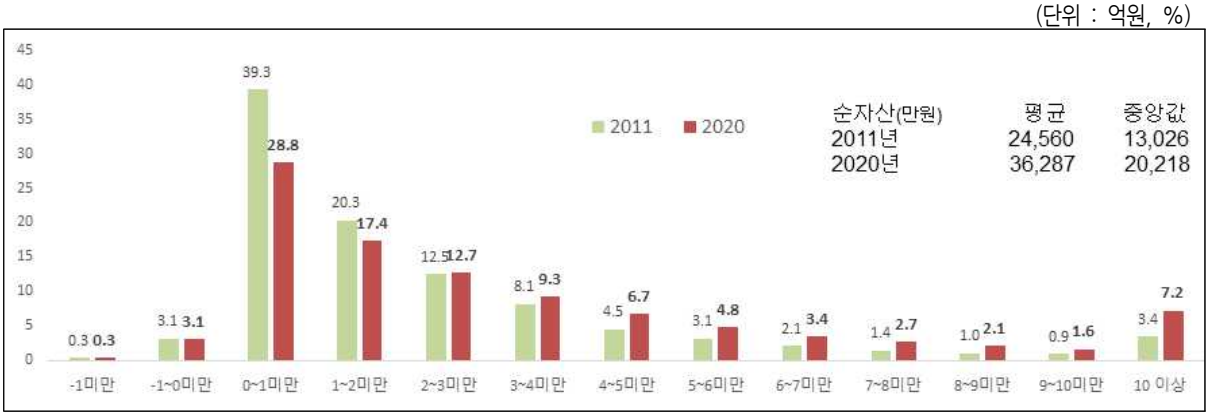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의거 저자 계산.

아래 그림은 2011년과 2020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2020년 전체 가구의 3.4%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였다. -1억원 미만인 가구 비중 또한 0.3%로 변함이 없었다. 순자산이 '0~1억 미만(39.3%→28.8%)' 구간과 1~2

억 미만(20.3% →17.4%)' 구간의 경우 가구 비중이 각각 10.5%p, 2.9%p 하락했는데, 특히 '0~1억 미만' 구간의 하락 폭이 특히 컸다. 이외의 구간은 모두 가구 비중이 상승했는데, 특히 순자산액 '10억 이상' 구간의 가구 비중은 3.4%에서 7.2%로 3.8%p 상승하여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유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10억 이상 가구 비중이 급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11]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

(단위 : 억원, %)



자료)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주) 2010년의 경우 제공되는 통계치의 구간 설정이 달라 2011년과 2020년을 비교.

2020년 평균 순자산은 36,287만원으로 이와 근사치인 순자산 '4억 미만' 가구의 누적 비중은 전체 가구의 71.6%였는바, 전체 가구의 약 70%는 평균 이하의 순자산액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순자산 중앙값은 20,218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50%는 순자산 보유액이 '20,218만원' 이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순자산 중앙값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순자산 7억 이상 보유 가구는 2010년 6..7%에서 2020년 13.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가구소득 변화만으로는 이러한 순자산 변화를 설명할 수 없기에, 자산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가격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자산 보유액이 마이너스 상태인 극빈층의 가구 비중이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은, 노력의 여하와 상관없이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부(富)를 일구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순자산 보유액이 조금이라도 존재했던 '0~1억 미만' 구간의 가구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 이들 계층에 특화된 사회 · 정치적 지원과 배려를 통하여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빈곤이 대물림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14]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0	-0.9	0.7	1.6	2.8	4.3	6.0	8.3	11.8	18.1	47.3
2011	-0.8	0.7	1.7	2.9	4.4	6.3	8.8	12.1	17.8	46.1
2012	-0.4	0.7	1.8	3.0	4.4	6.2	8.6	11.8	17.7	46.2
2013	-0.4	0.8	1.9	3.2	4.6	6.5	8.9	12.2	17.7	44.7
2014	-0.2	0.9	2.0	3.3	4.8	6.7	9.0	12.3	17.9	43.3
2015	-0.2	0.8	2.0	3.4	4.9	6.8	9.1	12.4	17.9	42.9
2016	-0.3	0.8	2.0	3.4	5.0	7.0	9.3	12.6	18.1	42.1
2017	-0.2	0.8	2.0	3.4	5.0	7.0	9.4	12.7	18.2	41.8
2018	-0.2	0.8	1.9	3.3	5.0	6.9	9.2	12.6	18.2	42.3
2019	-0.3	0.7	1.9	3.2	4.8	6.7	9.0	12.4	18.2	43.3
2020	-0.3	0.7	1.8	3.2	4.7	6.6	9.0	12.4	18.3	43.7
증감(%p)	0.6	0.0	0.2	0.4	0.4	0.6	0.7	0.6	0.2	-3.6`

자료)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순자산 1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비중이 0.6%p 줄어들긴 했지만, -0.3%로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태다. 이는 이미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분포를 통해 전체가구의 3.4%가 마이너스 상태임은 확인된 바 있다.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0년대 중반 그 비중이 소폭(0.1~02%p) 상승했다가 2020년 0.7%로 원위치 되었다. 3분위에서 9분위의 경우 편차는 있지만 2010년 대비 점유율이 모두 상승했다. 특히 6분위(0.6%p), 7분위(0.7%p), 8분위(0.6%p)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순자산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최상위 10분위의 경우 순자산 점유율은 2010년 47.3%에서 2020년 43.7%로 3.6%p 하락했다.

순자산 10분위의 점유율 하락은 2010년 47.3%에서 2017년 41.8%까지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진행되었었다. 문제는 이 추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10분위 점유율이 2018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분위의 점유율 재상승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2015년 이후 급등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순자산 10분위의 점유율 변화는 순자산 지니계수[8]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2010년 0.628이었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까지 꾸준히 하락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다소 완

8) 이 지표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자산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자산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알려준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로 소득 불평등과 관련하여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두 가지 방법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한다. 통계청에서는 순자산 지니계수를 또한 매년 산출하고 있다.

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니계수 역시 2017년을 기점으로 추세가 상승 전환되어 2020년 0.602까지 재상승했다.

순자산 평균값을 순자산 중앙값으로 나눈 '순자산(평균값/중앙값) 배수' 추이 또한 지니계수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2010년 1.97배에서 2017년 1.68배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었다. 하지만 이 배수 값 또한 2017년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되어 2020년 1.79배까지 재상승했다. 중앙값 배수 추이가 지니계수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중앙값이 평균값에 가까울수록 그 배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수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순자산 상 · 하위 계층 간의 격차(불평등)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12] 순자산 지니계수 및 (평균값/중앙값) 배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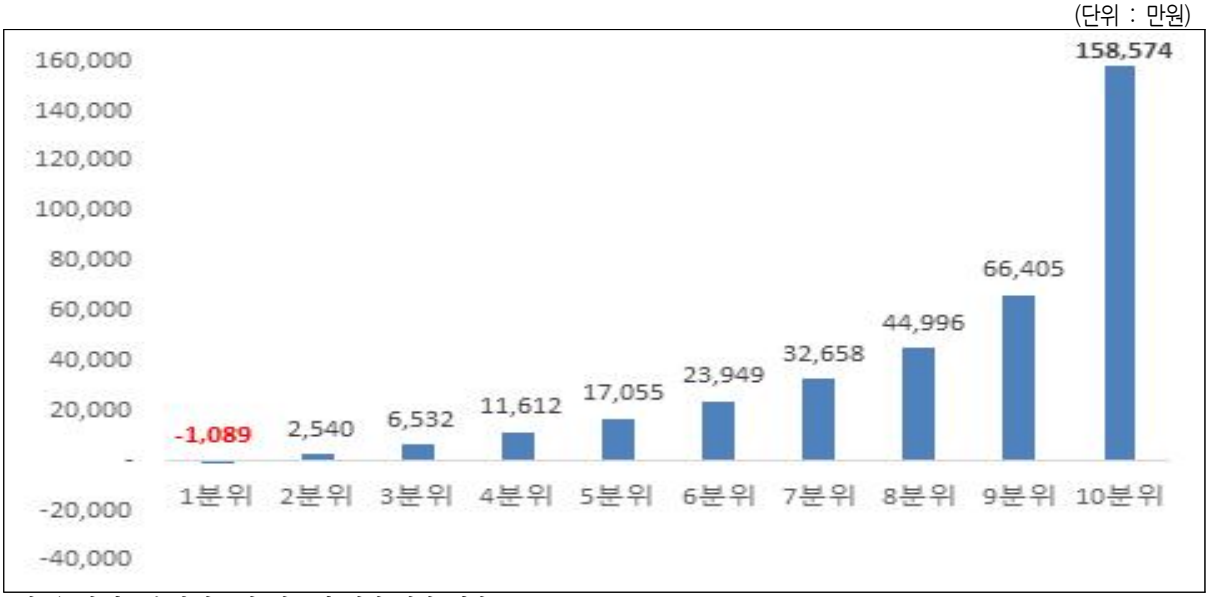
자료)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저자 계산.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과 평균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2020년 분위별 순자산액을 역산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순자산 10분위별 순자산액을 산출할 수 있다. 최하위 1분위의 순자산액은 −1,089만원으로 마이너스 상태인 반면, 최상위 10분위의 순자산액은 15억8574만원으로 순자산 10분위 배율(10분위/1분위)은 무려 146.61배에 달했다. 2분위 순자산은 2,540만원이었으며, 3분위 순자산은 6,532만원이었다. 4분위의 경우 11,612만원으로 1억원을 소폭 상회했으며, 중간 분위인 5분위(17,055만원)와 6분위(23,949만원) 간의 차액은 6,895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3분위 순자산액(6,532만원)보다 더 많았다.

1분위 ~ 3분위 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분위 간 격차는 2배수 미만(1.78~1.36배 사이)이었는데, 유독 9분위에서 10분위 사이의 격차만 2.39배로 매우 크게 나타나 진정한 의미의 고액자산가는 최상위 10분위 계층임을 증명했다.

[그림13] 2020년 순자산 10분위별 순자산액

(단위 :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의거 저자 계산

주) 순자산액은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을 통해 역산한 값으로, 점유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값이 통계치로 제공되고 있어, 실제 10분위별 순자산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2020년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 합산값은 100.1임)

순자산 10분위 가구의 순자산 15억8574만원은 10분위 다음으로 순자산이 많은 9분위 가구의 순자산(6억6405만원)에 비해서도 2.39배나 많은 거액이었다. 순자산 10분위 가구 순자산은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36,287만원)에 비해서는 4.37배, 전체 가구 중 가장 정 가운데 위치한 중앙값 가구(20,218만원)에 비해서는 7.84배나 많았다.

[표15] 2020년 순자산 10분위 주요 배율 현황

구분	10분위/1분위	10분위/평균	10분위/중앙값	10분위/9분위
배율(배)	146.61	4.37	7.84	2.39

자료) 저자 계산

3) 가구 재무 건전성 추이

지금까지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 가구 전체적으로 소득 및 재무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그런데 소득이나 자산 및 부채 관련 모든 항목 중 부채와 금융부채 그리고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각 78.77%와 92.03%, 140.14%로 여타 항목보다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가구들의 재무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부채 상환 여력은 충분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가계부채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2010년에도 151.56%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지만, 이후로도 부채가 계속하여 증가함으로써 2020년 171.36%에 달했다. 19.80%p가 상승하면서 증가율은 13.06%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만으로 가계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 가계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나라지표’에서 제공되는 2019년 OECD 기준에 의한 주요 국가들의 ‘가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이 190.6%로 스페인(105.0%), 프랑스(122.1%), 영국(142.1%), 핀란드(148.2%)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가구들의 소비지출을 크게 위축시키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의 경우 2010년 16.22%에서 2020년 24.64%로 8.42%p 상승하여 그 증가율은 51.88%에 달했다.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더 높은 원인으로는 부채 자체의 증가 이외에도 대출 상환방식에 따라 초기 설정했던 거치기간의 종료에 따른 원리금 증가 효과 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16]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및 원리금상환액 비율 추이

(단위 : 만원, %, %p)

구 분	부채	원리금상환액	처분가능소득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상환액
2010	4,618	494	3,047	151.56	16.22
2011	5,205	602	3,283	158.54	18.34
2012	5,450	596	3,476	156.79	17.15
2013	5,858	697	3,651	160.45	19.09

2014	6,051	830	3,819	158.44	21.73
2015	6,256	941	3,927	159.31	23.96
2016	6,719	1,068	4,021	167.10	26.56
2017	7,099	1,024	4,520	157.06	22.65
2018	7,668	1,102	4,671	164.16	23.59
2019	7,910	1,175	4,729	167.27	24.85
2020	8,256	1,187	4,818	171.36	24.64
증감(만원, %p)	3,638	693	1,771	19.80(%p)	8.42(%p)
증가율	78.77	140.14	58.11	13.06	51.88

자료)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저자 계산

위 그림은 가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순자산 대비 부채 비중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이다. 순자산 대비 부채 비중의 경우 2010년 20.02%에서 2020년 22.75%로 2.73%p 상승했다. 증가율은 13.63%였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2010년 53.53%에서 2013년 45.02%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그 비중이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면서 2020년 57.60%까지 상승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이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의 유동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가계의 재무 건전성 관련 모든 지표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림14] 순자산 대비 부채 /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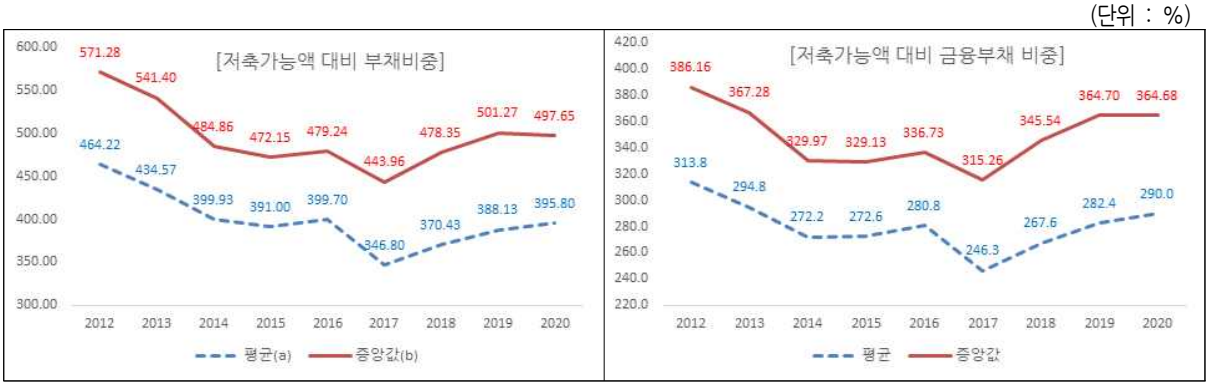
자료)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다음으로는 가구들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여유자금(저축가능액)을 가지고 부채 규모를 분석해 볼 것이다. 위에서 본 처분가능소득은 세전소득인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만을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에 꼭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있다. 필수 경비인 생활비마저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는 없기에, 저축가능액으로 부채 규모를 가늠해보려는 것이다.

저축가능액은 소득 및 지출 분석에서 이미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한 바 있다. 간략하면 첫째 방법은 소득과 지출액 모두 평균값을 사용하여 구한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소득과 지출액으로 중앙값을 사용하여 산출한 것이었다. 따라서 저축가능액(a)는 (평균 소득-평균 소비지출 -평균 비소비지출)의 값이고, 저축가능액(b)는 (소득 중앙값-소비지출 중앙값-비소비지출 중앙값)이다. 이처럼 저축가능액은 가구 소득액에서 일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시 언제든지 유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축가능액이라 가정할 수 있다.

[그림15]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 & 금융부채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자료에 의거 저자 계산.

소득 및 지출 중앙값으로 산출한 저축가능액(b) 대비 부채비율의 경우 2012년 571.28%에서 2017년 443.9%로 저점을 형성한 뒤, 2020년 497.65%로 재상승했다. 중앙값으로 산정한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비율이 497.65%라는 것은, 2020년 3월 조사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소득 및 지출액 중앙값 가구의 경우, 저축가능액(1,659만원) 전액을 부채(8,256만원) 상환에 사용할 때 약 5년(4.98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소득 및 지출 평균값(a)으로 산출한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비율 또한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는바, 2012년 464.22%에서 2017년 346.80%까지 낮아졌다가 2020년 395.80%까지 재상승했다. 2020년 기준 평균 소득 및 지출에 해당하는 가구는 저축가능액(2,086만원) 전액을 부채

(8,256만원) 상환에 사용할 때 약 4년(3.96)의 시간이 필요하다.

중앙값으로 산출한 저축가능액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2020년 364.68%로 금융부채 전액 상환에 필요한 시간은 약 3.65년, 평균값으로 산출한 저축가능액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290.0%로 금융부채 전액 상환에는 약 2.9년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다.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평균값(a)으로 산출한 부채비율이나 중앙값(a)으로 산출한 부채비율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하락 추세를 지속하다가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흐름만을 놓고 보면 순자산 지니계수의 움직임과 유사하다. 2017년까지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or 금융부채) 비중이 하락했던 주요인은 가계들이 소비(생활비)지출을 엄격하게 억제했기 때문이었다. 2017년 이후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or 금융부채) 비중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 증가율보다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저축가능액이 줄었기 때문이었다.

[표17] 저축가능액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p)

구 분	저축가능액		원리금상환액	원리금상환액/저축가능액	
	평균(a)	중앙값(b)		비중(a)	비중(b)
2012	1,174	954	596	50.77	62.47
2013	1,348	1,082	697	51.71	64.42
2014	1,513	1,248	830	54.86	66.51
2015	1,600	1,325	941	58.81	71.02
2016	1,681	1,402	1,068	63.53	76.18
2017	2,047	1,599	1,024	50.02	64.04
2018	2,070	1,603	1,102	53.24	68.75
2019	2,038	1,578	1,175	57.65	74.46
2020	2,086	1,659	1,187	56.91	71.55
증감	912	705	591	6.14%p	9.08%p
증가율	77.67	73.90	99.16	12.09	14.53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저자 계산

[표17]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저축가능액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을 산출한 것이다. 평균값으로 산출한 저축가능액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12년 50.77%에서 2020년 56.91%로 6.14%p 올랐다. 중앙값으로 산출한 저축가능액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12년 62.47%에

서 2020년 71.55%로 9.08%p 상승했다.

[표18]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 ·금융부채 · 원리금상환액 비중 증가율(2012~2020) 비교

구 분	부채 비중		금융부채 비중		원리금상환액 비중	
	평균(a)	중앙값(b)	평균(a)	중앙값(b)	평균(a)	중앙값(b)
증가율	-14.74	-12.89	-7.57	-5.56	12.09	14.53

관련 통계치가 제공된 2012년에서 2020년까지 저축가능액 대비 각 비중별 증가율만 놓고 보면, 부채 비중이나 금융부채 비중은 하락했고,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상승했다. 이는 동일 기간 증가율만 놓고 보면, 부채 증가율은 51.49%(5,450만원 → 8,256만원), 금융부채 증가율은 64.22%(3,684만원 → 6,050만원), 원리금상한액 증가율 99.16%(596만원 → 1,187만원)로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3. 나가며

로마 신화에는 운명의 신이 둘 존재한다. 포르투나와 오카시오(occasio)다. 오카시오는 '때, 상황'을 의미하는 occasion의 어원인데, 오카시오는 앞 머리칼이 무성해 알아보기 어렵고 뒤쪽은 민머리이며,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다고 한다.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기회를 놓치면 잡기도 힘들고, 한 번 놓치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붙잡지도 못한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현실이 오카시오 같다. '기회'뿐 아니라 '위기'라는 측면에서도 닮았다. 위기 또한 사전에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발생하면 이미 그 순간부터 대응하기도 불가능하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관리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인 데, 기회 또한 놓치기 쉽다.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응분의 대가를 요구한다. 결국 위기는 위기가 터졌을 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관리하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가구는 아이를 낳지 않고 있으며, 늙어가고 있다. 2015년부터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불평등 추세가 다시 강화되고 있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가구들의 재무 건전성도 추세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라 2010년대 중반 이후 소득 분배 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세전소득으로서의 노동 소득(경상소득) 불평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가구주 특성(성, 종사상지위, 교육 정도, 혼인상태,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 변화를 분석하면 불평등의 심각성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 · 저 자산가 계층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올 12월에 발표될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모든 지표가 더 나빠질 것이라 예상된다.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될만한 요인들을 사전에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위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시켜야 한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가계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은 투자대상이 아니라 주거 수단'이라는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구축하여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가격을 방치하고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은 소비 여력 자체가 부족하고, 고소득층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를 자제하면서 부채까지 증가시키며 부동산 및 금융자산 투기를 늘리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증여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또한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세제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 극빈층에 특화된 지원책을 구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지원책은 우선하여 2020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이 '0원 미만'인 가구나 순자산 보유액이 마이너스인 가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현재 2010년과 비교할 때, 이들 가구 비중이 조금도 줄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지 노력만으로 이들의 구간 이동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화된 지원책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끝)